

‘화재’ 금타 광주공장 3개월여 만에 합동 현장감식

정련공정동서 경찰·소방 등 참여
원인 조사 앞서 해체 작업 진행
인근 주민 “분진 피해 여전” 호소

대형 화재로 공장 절반 이상이 잿더미로 변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사고 3개월여 만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18일 오전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시 소방본부 등은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제2공장 정련공정동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광주경찰청은 화재 직후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 등 4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이어왔으나,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내부 감식은 그동안 미뤄져 왔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 22명이 투입됐다. 감식반은 내부 진입이 위험하다고 판단, 소방 장비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발파 추정 지점인 2층 산업용 대형 전기 오븐 주변을 중심으로 사진 촬영과 기록 작업을 했다.

또 약 9에 달하는 대형 전기 오븐을 위아래 체인으로 체결해 발파, 일부 정밀 감식을 이어갔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화재와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정련공정동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광주경찰청 등은 사고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붕괴로 인해 전기 오븐 등의 변형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 꼼꼼한 확인을 통해 원인과 확산 경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7일 화재 발생 당시 목격자들은

불이 정련 공정 내 전기 오븐에서 생고무를 예열 하던 중 불꽃이 튀며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사고 직후 전기 오븐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엉뚱한 곳에 분사됐다는 의혹

과 확산을 막아야 할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돼 감식반은 단순 발파 요인뿐 아니라 불길의 급속히 확산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던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대피 방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관련 시설 설치·관리 상태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 감식과 동시에 진행되는 정련공정동 철거 공정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산구는 지난 6일 정련공정동 건물 해체 공사를 조건부 승인하며 안전 보강을 마친 뒤 감식을 허용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4만3천여㎡,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1월까지 압쇄 방식으로 해체 공사가 진행된다. 해체 과정에서만 건축폐기물이 9만2천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공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송광아파트 주민 임모(70)씨는 “매일 철거 기계 소리가 울려 생활이 어렵고, 창문을 열면 집안으로 먼지가 들어온다”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분진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50대)씨는 “분진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윗부분이 뚫려 있어 소음이 없다”며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소음과 분진 문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보도연맹 희생자’ 형수·조카 2심서 손배소 인정

광주고법, 1심 불인정 부분 취소
“망인과 공동생활…고통 상당”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휘말려 숨진 희생자의 친척들도 함께 살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광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일부를 최근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50년 7월11일 당시 광산군 삼도면 송산리 암탁골에서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

가 광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관한 희생자로 진실규명했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 등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수와 조카들도 함께 대가족을 이뤄 주거 공동생활을 같이했던 만큼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주운 체크카드로 수백만원 뽑아 쓴 40대 구속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로 범행

타인의 체크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뽑아 사용한 40대가 구속됐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형령 등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북구 두암동 한 주차장에서 주운 타인의 체크카드로 현금 480만원을 인출, 모두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카드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인출이 가능했던 건 A씨가 주운 체크카드 뒷면 예비비번호가 적혀있었기때문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를 송치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광주 노대동 아파트서 불…1명 화상·16명 연기 흡입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 중 발화 추정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화상 피해 주민 등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8일 광주 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5분께 남구 노대동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한 세대가 모두 불에 타고,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과 단순 연기를 마신 16명 등 총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18분 만에 모두 꺼졌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384세대 규모 지상 15층으로 2007년 12월 준공됐지만,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할 스프링클러는 없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시설법상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부터 16층 이상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확대돼 개정됐다.

당국은 세대 내 거실에서 휴대전화 등 4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충전하던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성학 기자

무안서 1t 트럭·승용차 충돌…1명 사망

무안군 한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던 차량 두 대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8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5분께 무안군 해제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각 차량 탑승자 5명 중 2명이 중상을,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승용차 동승자 A(70대·여)씨의 경우 치료 중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법용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